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4

Vol. 52

# 경북 행복 BRIEF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최우진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3  
홈 페이지 www.ghf.or.kr

01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손능수(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김순양(영남대학교 교수)

02

## K-키친 모델개발사업

오난숙(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박주홍(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외

03

## 다가오는 지역돌봄의 시대와 경상북도의 과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손능수(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김순양(영남대학교 교수)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함.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은 유학, 대안교육, 비행, 건강문제, 학업부적응, 은둔, 가정해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시기에 받아야 하는 보호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개인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저해 받게 되고, 이는 국가적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는 꿈드림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취업, 자립,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기준(2021. 3. 1 ~ 2022. 2. 28) 1,696명임.
- 학교 중단 후 사회·교육적 안전망 약화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건강이 취약해지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성장과 자립, 사회적 발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 5월 30일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임.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단지 정책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업무를 수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시행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짐. 전국적으로 22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담공무원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직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경상북도 관내에는 15개소(경북청소년지원센터 17개소, 시군센터 14개소)가 있음.

그림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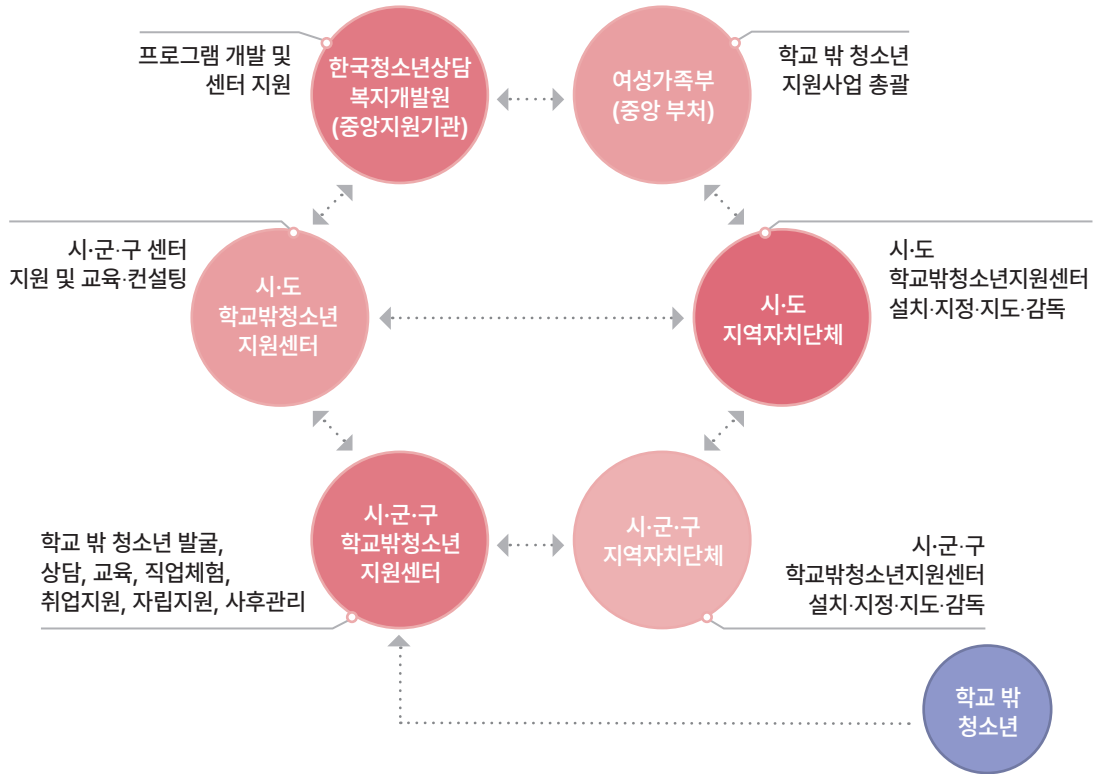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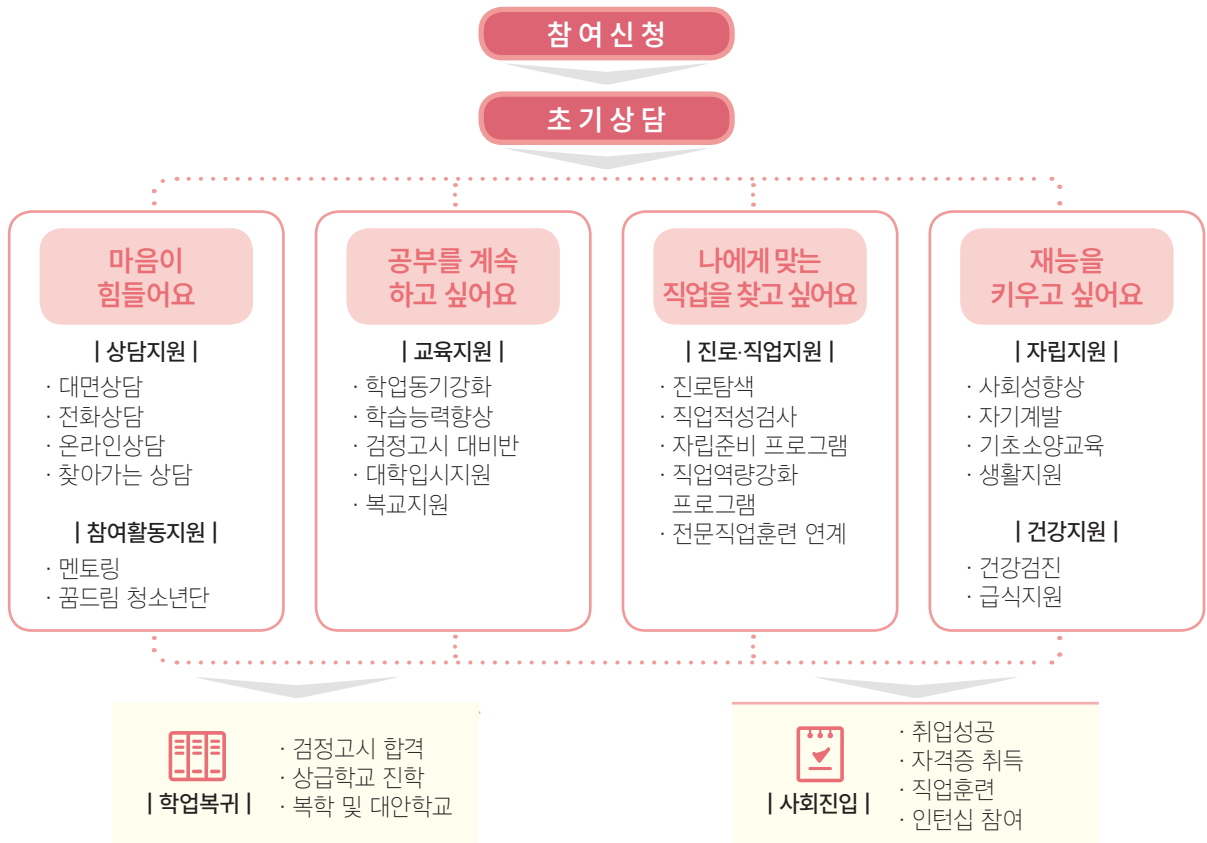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서비스 흐름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절차를 보면, 우선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지원센터에 서비스참가 신청을 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초기상담을 시행함.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심층적인 추가상담을 실시함. 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상담지원, 참여활동지원, 교육지원, 진로·직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그림 2).
- 경상북도의 도내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2022년 기준 1,696명으로 전체 학생의 0.7%를 차지함.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0.3%, 중학생 0.4%, 고등학생 1.6%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표 1).

표 1. 전국 및 경상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단자(중단률)	학생수	중단자	중단률	학생수	중단자	중단률	학생수	중단자
2022 <sup>1)</sup>	전국	42,755(0.8)	2,672,340	15,389	0.6	1,350,770	7,235	0.5	1,299,965	20,131	1.5
	경상북도	1,696(0.7)	127,912	391	0.3	63,732	245	0.4	64,967	1,060	1.6
2021 <sup>2)</sup>	전국	32,027(0.6)	2,693,716	11,612	0.4	1,315,846	5,976	0.5	1,337,312	14,439	1.1
	경상북도	1,228(0.5)	129,079	286	0.2	62,499	174	0.3	66,899	768	1.1
2020	전국	52,261(1.0)	2,742,219	18,366	0.7	1,294,559	10,001	0.8	1,411,027	23,894	1.7
	경상북도	1,845(0.7)	131,374	436	0.3	61,393	299	0.5	71,272	1,110	1.6

주 1) 2021. 03. 01 ~ 2022. 02. 28 2) 2020. 03. 01 ~ 2021. 02. 28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20~2022)에서 발췌함

- 경상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지원, 학습지원, 진로·직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참여활동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러한 사업범주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비중도 사업 간에 매우 상이함. 센터 직원의 배치나 업무분장도 사업범주대로 되어있지 않고, 통합지원으로 여러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우선 핵심 지원사업인 자립 및 학습지원은 검정고시, 자격취득 등 학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촉진을 목표로 하는데, 주요사업은 학습지원단 운영(1:1 학습지원), 수능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학원비 등 직접지원, 우수청소년 시상 등임. 2022년도 학습지원단은 17개 시군 200명, 이용 청소년은 21개 시군 375명임.

### 3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분석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120사례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19일에 시작하여 10월 11일에 조사를 완료함.

· 학교 중단 관련 일반사항 :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은 초등학교 때 5.8%, 중학교 때, 15.8%, 고등학교 때 71.7%, 기타 6.7%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때가 가장 높았음.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생활 적응 문제(지나치게 엄격한 학교 규율, 선생님과과의 갈등 등)가 3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검정고시,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26.7%, 학업 문제(성적부진, 상급학교 진학 포기 등) 14.2% 등임.

그림 3. 학교를 그만 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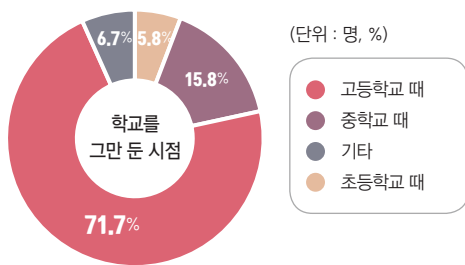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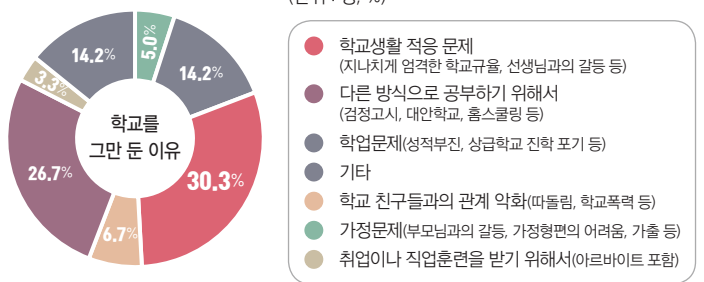


그림 4.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생활실태 : 학교를 그만둔 이후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에 다니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이 더 좋은 점으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55.5%로 가장 높았음.

그림 5.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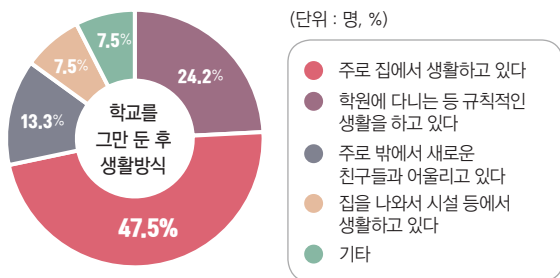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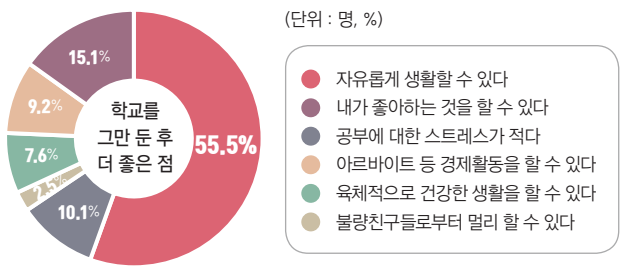


그림 6. 학교를 그만 둔 후 더 좋은 점



· 지원욕구 : 학교에 다닐 때에 비해 가장 힘든 점은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된다 27.5%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의 시선과 편견 18.3%, 소속감이 없고 외롭다 16.7%, 진로상담 등을 하기가 어렵다 8.3% 등의 순임. 현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진학 및 학업지도 46.2%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20.2%, 심리상담 14.3%,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 13.4% 등의 순임.

그림 7.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 가장 힘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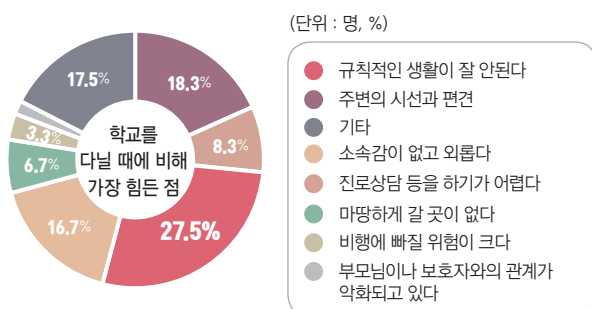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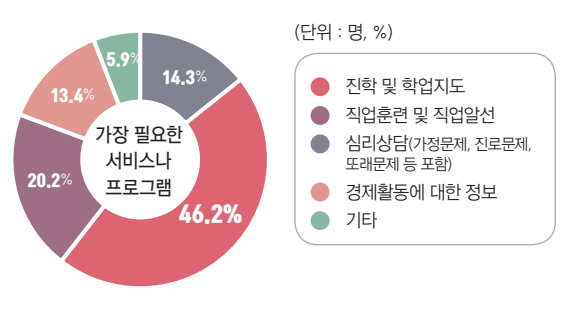


그림 8.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 4 심층면접조사 결과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상북도 내 5개 시·군(경주, 포항, 안동, 상주, 의성)을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5명(경주 2, 안동 2, 의성 1), 학교 밖 청소년 부모 4명(경주 2, 안동 2),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자 7명(경주 1, 포항 2, 안동 2, 상주 2)으로 총 16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21일 ~ 10월 5일까지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표 2. 심층면접조사 결과

구분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개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로는 시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나와 맞지 않아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려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특기를 살리려고 등 스스로를 위한 자발적인 이유가 많음. 홈스쿨링을 하기도 함.</li> <li>·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복교보다는 대학 입시 등 진학을 위해 힘쓰고 있음. 따라서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입시컨설팅 등 적절한 지원방안이 강화되어야 함.</li> </ul>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활동들이 다양하고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대입 관련 학습지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수능 시험을 위한 지원을 원하고 있음. 자립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의 한계와 강사 초빙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li> <li>· 시군 센터 개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총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 특히 도 차원에서 지역 간 교류 차원의 캠프 등 도 차원에서 총괄하는 프로그램 개발.</li> </ul>
관리 및 연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해서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하였고, 심지어 비밀보장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이미 자퇴를 결정한 학생이라면 학업중단속려제를 자퇴 후의 생활 및 진로 설계를 하는 건설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li> <li>· 학교 및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 관계에서는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시스템 문제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li> </ul>
성과 실태 및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는 검정고시 합격, 복교, 대학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등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느 청소년과 같이 대학 입시(수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검정고시 합격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 필요.</li> <li>·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안내와 설명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li> </ul>

## 5 제언 :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사업현황,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책적·행정적 개선책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함.

표 3.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p>학업중단속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속려제 대상 학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방해야 함. 원인에 맞추어서 오히려 밖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학업중단속려제를 종료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의 성향, 희망, 특기 적성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방향 제시.</li> <li>• 속려기간 동안 상담서비스는 물론, 치유, 문화활동, 멘토링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p>발굴 및 사전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단체 등과 협력 강화, 홍보 강화, 성과자료 전파 등 다양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발굴.</li> <li>• 발굴에서 일선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유관 상담기관 등 간에 협력과 연계 강화.</li> </ul>
<p>초기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로 상담방식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고, 상담자도 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타 상담기관에 위탁.</li> <li>• 부모 상담 강화 : 초기상담에서는 부모에 대한 상담도 동시에 진행하여 부모가 가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동시에 지도하게 해야 함.</li> </ul>
<p>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별(학교 밖 청소년이 된), 학교급별, 유형별, 희망진로별 등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li> <li>• 경상북도의 환경적, 지리적, 행정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지리적 특성과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권, 구미권 등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도내 일원화되어있는 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유형별 모형(예로써 농촌형, 일반형, 도시형 등)을 개발하여 시행.</li> <li>•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직접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배치, 모니터링,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 역할 강화.</li> <li>• 프로그램을 광역화하여(권역으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교육프로그램 강화.</li> </ul>
<p>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차원의 협력과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전담직위 배치). 사업예산 확충(통합재무제표 작성).</li> <li>•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사업 모델 개발, 시군센터에 소통·지원 강화.</li> <li>• 도(道)는 기획, 조정 역할 강화, 사업의 광역화 선도, 재정지원 강화, 도 센터 역할 강화.</li> <li>• 시군센터는 센터 내의 인력과 기구들 간 업무협력 강화, 중복·유사 프로그램이 없는지 점검. 내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군센터는 1차 지원기관 역할 수행, 도센터는 광역서비스, 전문화된 심화서비스 등 2차 기관으로서 시군센터 지원업무 중심으로 운영.</li> </ul>
<p>연계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li> <li>•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광역단체인 시도의 연계역할 및 허브(hub)기능이 중요.</li> <li>•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이 지역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부기관들 간에 협력, 연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특히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li> </ul>
<p>모니터링 및 성과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기관, 주기, 방식, 기준과 지표, 절차, 결과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함.</li> <li>•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지표 개발</li> <li>• 프로그램 평가 강화 : 프로그램의 질 평가지표 강화,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연계 부문의 평가 강화</li> <li>•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를 차별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li> </ul>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적조사 및 추수지도(3년 정도) 강화.</li> <li>•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한 경우에는 일선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복귀 이후의 학업성적, 교우관계, 적응실태 등을 파악.</li> <li>• 사후관리 방식, 기관, 지표, 활용방안 등을 체계적 관리 :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Big data) 구축을 지원하여 국가전체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li> </ul>

##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2022). 학교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경상북도. (2023). 2023 여성아동정책관 업무편람.
- 경상북도교육청. (2020~2022). 경북교육통계연보.
- 교육부. (2022). 교육통계연보.
- 노기호. (2017). 학교밖청소년 지원법제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8(2), 27-57.
- 배옥현. (2019).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교육부. (2023). 2023 학교밖청소년 지원안내서.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http://www.kdream.or.kr>)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3)에서 연구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스 페 셜 코 멘 트

## SPECIAL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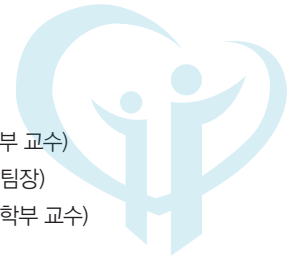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근거하여, 도내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가 설치·운영 되어 온 이래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2,000명(교육부 통계자료 : '22년 1,905명)에 임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단순 비교해 봐도 학교 안 청소년(학생)에게 지원되는 1인당 지방재정교부금이 1,4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의 일부인 사업비에 의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이 또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의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해서는 속수무책이며, 학교, 지역 사회 유관기관들이 연계와 협력을 통한 발굴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그만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의 모형으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매우 단발적인 사업성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한 시기에 전인적 교육 및 활동에 불균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기관(예. 공립형 대안학교) 및 경북형 새로운 모형을 통해 통합적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부처와 상관없이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집행할 것을 제언해 보며, 요원한 일이 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오귀영

# K-키친 모델개발 사업



오난숙(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곽인범((주)Polaris3D 대표), 박주홍(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석미란(구미대학교 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 교수)

윤진숙(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이승철(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원도(한샘키친 구미in 팀장)

이희재(EG건축사무소 소장), 장상준(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학부 교수), 정지균(구미대학교 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 교수)

조선경((주)구르메푸드랩 대표), 조아라(함지음식문화연구소 팀장), 허영진(뉴로메카 이사)

## 1 경북 외식 주방환경 개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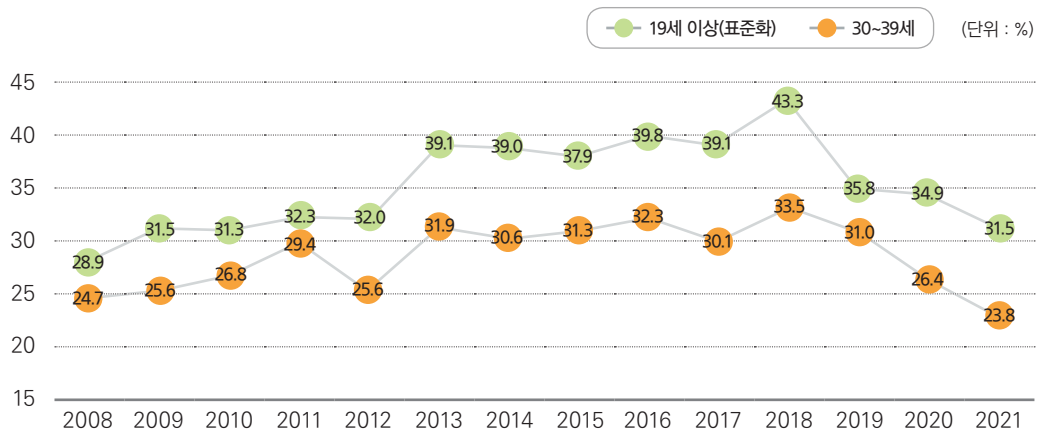
### 1)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의 식생활

- 1인 가구, 맞벌이 증가 등으로 외식(배달) 및 간편식의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매년 하루 1회 이상 외식률(19세 이상)은 2008년 24.7%에서 2018년 33.5%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31.0%, 2021년 23.8%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외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 '가치소비'로 외식의 변화

- 2021년 연령별로 외식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9세로 31.5%이었으며, 그다음은 40~49세 30.4%, 10~18세 26.7%, 19~29세 23.7% 순으로 주로 청년층이었음.

그림 1. 하루 1회 이상 외식률(19세 이상) 2021



- 외식률이 높은 청년층은 '가치소비'를 주로 하고 있으며, 외식업계도 환경보호 및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엠제코(MZ+ECO) 세대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외식 가치소비’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외식환경, 안전 및 위생, 트렌드를 소비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가치소비’의 중심 키워드는 ‘안전 및 위생’이었으며, 여기에 간편식, 푸드테크 등의 다양한 트렌드가 추가되고 있음.

### 3) 키친의 새로운 트렌드 ‘푸드테크’

-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정보기술, Information·Technology)·BT(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의미함.
- 또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로봇 등을 활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서빙·조리·배달 로봇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음.
- 푸드테크는 ‘新식품 개발, 제조 및 유통의 효율화, 외식, 부산물 처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대체식품, 간편식품, 식품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배달앱 및 무인주문기,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음. 이 중에 외식서비스 분야인 주방로봇을 중심으로 K-키친 모델 개발에 적용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K-키친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첫째, 외식사업 주방 우수사례 및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음.
- 둘째, 경제적이고 편리한 K-키친 모델 개발을 위해 적용가능한 푸드테크 분야를 분석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음.
- 셋째, 경상북도 도민 및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K-키친 모델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넷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외식업 및 주방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푸드테크를 접목한 K-키친 모델을 제시하였음.

그림 2. 경북형 K-키친 모델 개발 추진과정



### 3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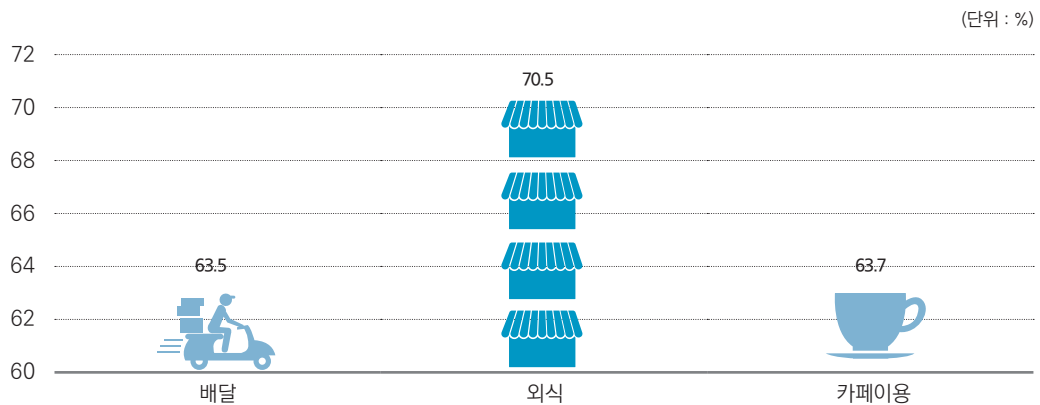
1) 도민 및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항, 음식점에 대한 인식, K-키친 모델개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외식 주방 분야, 푸드테크 관련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 : 도민 1,000명 / 외식업 종사자 481명
- 조사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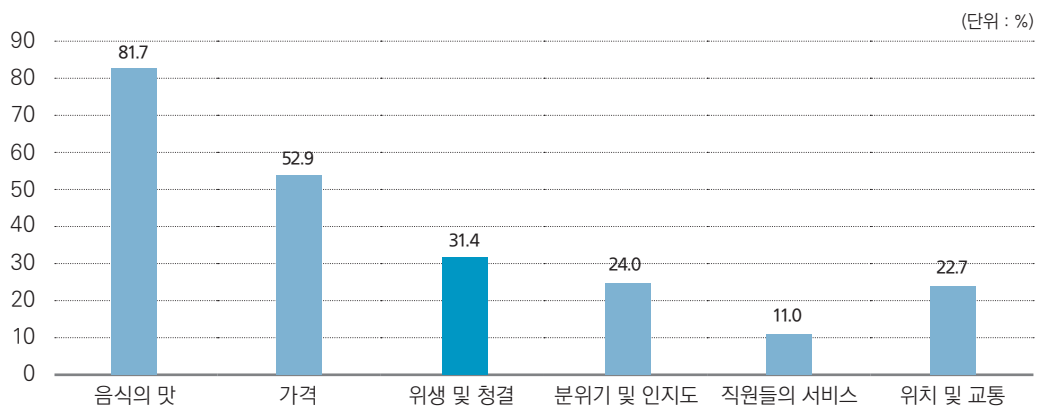
- 도민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배달(take-out 포함)을 63.5%가 하고 있었으며, 외식은 70.5%, 카페 이용 63.7%가 하고 있었음.

그림 3. 도민의 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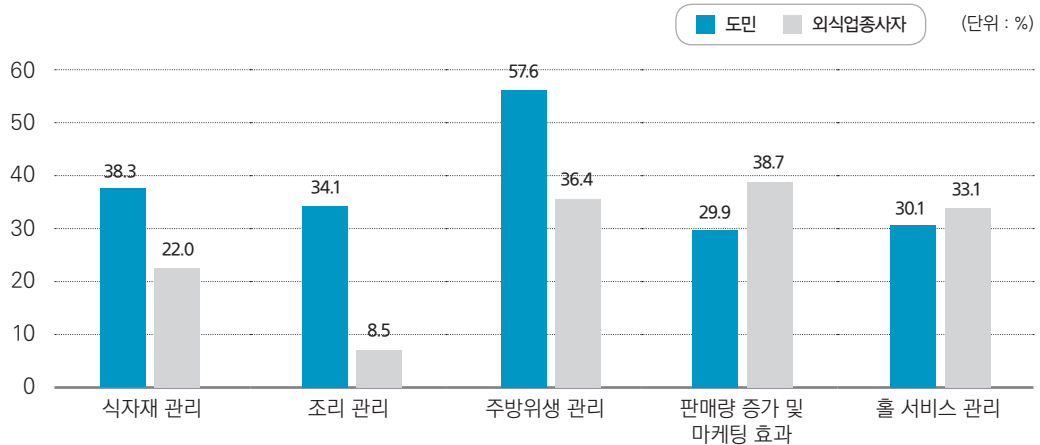
- 도민이 음식을 선택할 경우 음식의 맛(81.7%), 가격(52.9%)으로 선택, 위생과 청결(31.4%)에 대해서도 높아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그림 4. 도민의 음식점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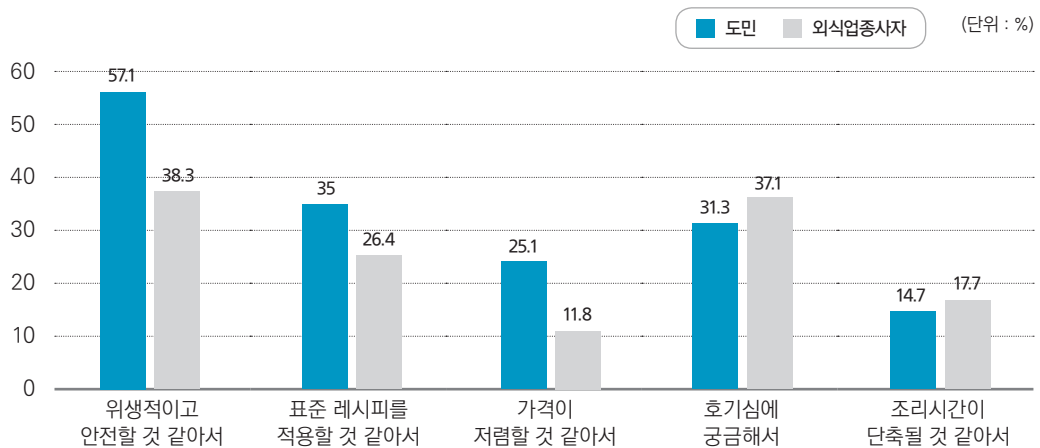
- 푸드테크를 도입할 경우 주방의 위생관리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도민 57.6%, 외식업 종사자 36.4%이었음. 코로나19로 위생과 청결에 관심이 높아진 도민의 요구에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5. 푸드테크를 도입 할 경우 일어날 주방의 변화(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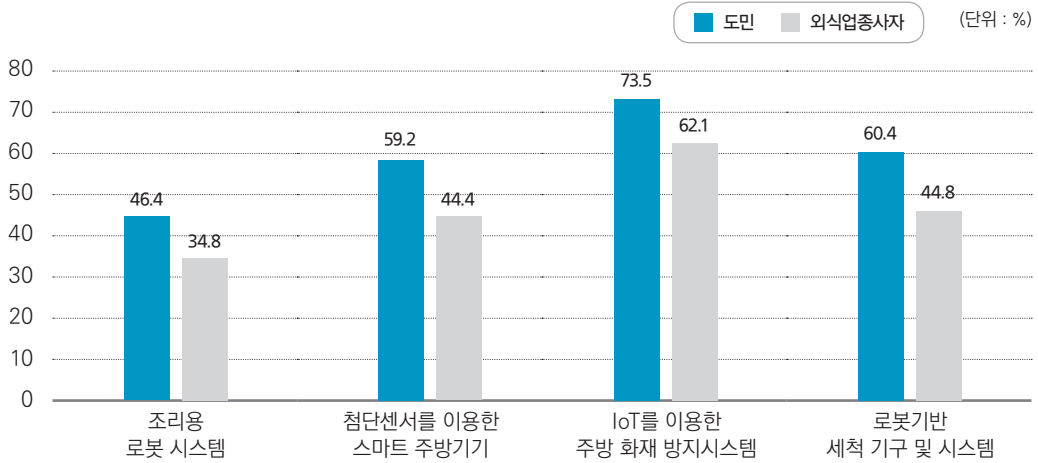
- 푸드테크 기반의 음식을 먹을 의향이 있는 도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위생적이고 안전할 것 같아서가 도민 57.1%, 외식업 종사자 38.8%로 가장 높았음.

그림 6. 푸드테크를 기반의 음식을 먹을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



- 전반적으로 외식업 종사자보다 도민이 푸드테크를 활용한 K-키친 모델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외식업 주방에 적용하였으면 하는 푸드테크 분야는 조리용 로봇 시스템, 첨단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주방기기, IoT를 이용한 주방 화재 방지시스템, 로봇기반 세척 기구 및 시스템 등이었음.

그림 7. 외식업 주방에 적용하였으면 하는 푸드테크 분야



#### 4 푸드테크를 적용한 주방에 일어날 변화

1) 주방에 첨단센서를 이용한 주방기와 조리용 로봇이 도입 될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주방은 위생적인 안전보장과 함께 조리과정의 노동강도를 비약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조리흡 등 폐질환, 심장질환 등 외식업 종사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조리과정 중 기름을 사용해서 튀김, 볶음, 구이를 만들 때 조리흡(cooking fume)이 발생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사례조사 결과 200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사망한 조리사에게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21년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하였음.

2) 고강도의 조리과정을 시스템 및 조리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방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힘든 근무환경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과 실질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해 주방 등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의 운영 경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로봇시스템은 이미 인건비보다 운영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시스템이며,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식업 특성상 야간 근무, 휴일근무, 24시간 운영 등 영업시간이 길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종사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 부담감 또한 조리 로봇의 대체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임.
- 음식점에서 조리용 로봇을 사용한 주방의 자동화로 인하여 인원이 감소할 경우 2024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1명은 1달에 2,060,740원, 1년에 24,728,880원으로 조리용 로봇이 30,000,000원인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조리용 로봇 구입비용을 넘어서게 되며, 이후 조리용 로봇으로 영업을 할 경우 음식점은 1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함.

그림 8. 조리용 로봇과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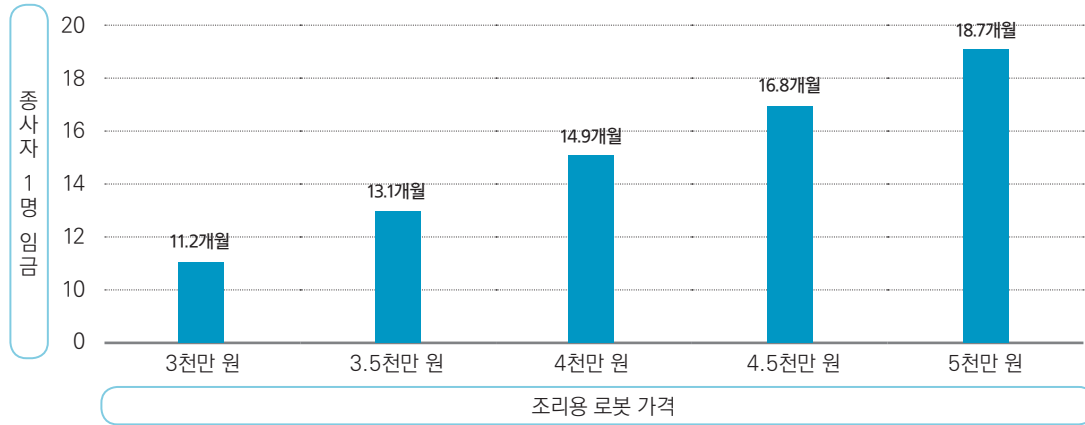


표 1. 조리용 로봇 가격과 인건비

(단위: 원 / 월)

일근무 시간 (시간)	주근무 일수 (일)	1주 임금 (원)	주휴 수당 (원)	복리 후생 (식대) (원)	주급 (원)	연봉 (52주) (원)	4대 보험 (원)	퇴직금 (원)	1년 합계 (원)
8	5	394,400	78,800	40,000	513,200	26,686,400	2,776,474	2,668,640	32,131,514
8	6	473,280	78,800	48,000	600,080	31,204,160	3,246,505	3,120,416	37,571,081
8	7	552,160	78,800	56,000	686,960	35,721,920	3,716,536	3,572,192	43,010,648
10	5	493,000	78,800	40,000	611,800	31,813,600	3,309,912	3,181,360	38,304,872
10	6	591,600	78,800	48,000	718,400	37,356,800	3,886,630	3,735,680	44,979,110
10	7	690,200	78,800	56,000	825,000	42,900,000	4,463,349	4,290,000	51,653,349
12	5	591,600	78,800	40,000	710,400	36,940,800	3,843,349	3,694,080	44,478,229
12	6	709,920	78,800	48,000	836,720	43,509,440	4,526,756	4,350,944	52,387,140
12	7	828,240	78,800	56,000	963,040	50,078,080	5,210,162	5,007,808	60,296,050

\* 음식점 일근무시간별 임금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

\* 복리후생 : 1일 근무식대 8,000원 기준 계산

\* 4대 보험 : 사업주 부담금 10.40% 가정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4.00%,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1.0%>

3) 주방에 푸드테크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는 현재 주방 이용에 제약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도 많은 생활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음.

- 경상북도형 K-키친 모델은 경상북도 외식주방 현황 및 우수 사례조사, 주방 분야별 조사 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였고, 또한 경북도민과 외식업 종사자의 미래형 주방과 푸드테크 인식에 대한 적용방안을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도를 반영하여 한식 3종, 중식 3종, 일식 3종, 미래형 주방 시스템 1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모델을 제안하였음.
- <미래형 주방 시스템 개요>와 같이 음식재료를 조리하고 서빙하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가 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회적, 경제적 진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음식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음.

그림 9. 미래형 주방 시스템 개요

## 미래형 K-kitchen

**스마트팜**

- 실내 환경 스마트 팜 시스템
- 소비량이 많은 공통 재료 (배추, 당근, 양파, 마늘 등) 재배 시스템
- 평균 소비량, 식단표, 식수인원 일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배량 조절
- 소비 직전 수확하여 신선도 유지

**화재/사고 모니터링**

- 온도, 습도, 전류량, 진압, 개별 장비별 온도 등 주방 내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 주방 내 열상, 삼기, 누출 및 분석
- 시 & 데이터 기반 사고 감지 시스템
- 근로자 조리할 예측 및 예방 시스템
- 위험감지 시 관리자에 의한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 연동

**주방운영 인터페이스**

- 주방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입력, 생성형 시 기반의 음성 제어
- 출력, 그래픽 인터페이스
- 주방 내 상태, 운영 상황, 재료 진량 등 전체 주방 운영을 위한 대시보드
- 개인화 장비(스마트워치 / 폰/태블릿 PC)를 통한 전체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이송 로봇**

- 3축 직교 로봇
- 조리 장비 간 재료 및 음식 이송
- 주방 용품, 퇴식구 등 기밀 이송
- 주방 내 대상물의 이동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로봇

**자동 디스펜서**

- 식기류 자동 공급 장치
- 그릇, 조리기구, 수저 등의 식기류들
- 살균보관/개별 디스펜싱
- 운영시스템 상 제조 메뉴에 따른 자동 스케줄링

**취사로봇**

- 조리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 로봇
- 실제 음식 조리 과정을 모사 학습하여 시범과 동일한 조리 수행
- 조리 과정의 세분화 / 데이터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음식 제공

**재료보관/디스펜서**

- 식재료 자동 공급 장치
- 식재료 살균 보관, 진량 수집, 개별 공급
- 인공지능 기반 재료 신선도 측정
- 레시피에 최적화된 재료 관리 시스템
- 스마트팜 등 생산 공정에 직접주문

**자율서빙로봇**

- 이송로봇으로 부터 전달받은 음식을 자율 서빙
- 전체 주문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서빙 프로세스 스케줄링
-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스페셜 코멘트

## SPECIAL COMMENT



외식산업은 국내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최근 여행트렌드는 먹거리를 일순위로 할만큼 문화와 관광의 중요포인트로 외식산업 외연확장의 기회가 온 반면 인력난, 고령화,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은 외식 분야에 푸드테크 기술을 입혀 외식산업 문제해결을 넘어 성장을 도모하는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푸드테크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산·관·학 협력으로 외식업체 대상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식품 로봇 분야)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행복재단에서 개발한 K-키친 모델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효율화된 주방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점과 규모가 작은 업종도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식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현재 고물가, 고임금, 구인난 속에서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외식테크가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점으로 보아 미래형 K-키친 모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상북도 식품의약과장 이정아

# 다가오는 지역돌봄의 시대와 경상북도의 과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다. 2년 후 시행이 예고된 이 법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돌봄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특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복지란 중앙정부 정책을 대리집행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김보영, 2021). 하지만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협업 등의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이전의 복지에 대한 접근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돌봄 분야는 우리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향후 복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복지뿐 아니라 요양, 보건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일자리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이철우 도지사는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를 선언하며 돌봄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경상북도, 2024) 그러다보니 돌봄정책은 유아, 아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고령화 문제 역시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섰기 시작했고, 특히 지역소멸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시군의 80% 가까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북의 상황은 경북이 단지 저출산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분야에 제한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평생에 걸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돌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아동돌봄 뿐 아니라 노령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인돌봄, 또한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통한 돌봄이주<sup>1)</sup> 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으로 전국적인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 경상북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일본에서는 돌봄경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개호이주(介護移住)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돌봄이주를 기대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성과

지난 정부에서는 2018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community care) 정책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이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이 사업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 홈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 27).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책이 충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개편 없이 진행되어서인지, 실제로 시설 입소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보다는 기존 지역 복지 사업의 연장선에서 욕구 수준이 낮은 대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선도사업이 갖는 명백한 한계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복지 체계와 달리 지역 주도형 모델을 채택해 큰 변화를 시도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사업 모델을 제공하는 대신,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29). 이 접근법은 한국 지역복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정책 모델이며, 지역의 독자적인 계획과 실행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지침 없이 지역 스스로가 정책기획, 서비스 설계, 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특성과 필요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돌봄서비스 사업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돌봄SOS센터 사업은 기존의 제도에서 소외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욕구, 즉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재가, 시설, 이동, 주거, 식사,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8대 서비스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서울시의 돌봄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지역복지통합본부 공공돌봄지원팀, 2020). 서울시는 이 사업에서 역시 기존 중앙집권적인 돌봄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치구청 본청과 동주민센터에 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을 돌봄매니저로 배치했다. 이들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권적 돌봄서비스와 이전의 지자체 복지와의 차이점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복지정책과 행정의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울 돌봄SOS센터 사업에 참여한 일선 읍·면·동 공무원 및 시·군·구 본청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지선 외, 2021)에서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설계했고, 관리자들은 사업에 대한 주도성을 발휘하며 부서 간 협력과 협상을 이끌어냈다. 또한 관리자들은 필요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했다. 민간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관리를 넘어 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위한 기준 설정과 같은 능동적 관리가 나타났다. 통합돌봄이나 돌봄SOS센터 사업에서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욕구에 따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험을 통해 자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습득해 나갔다. 이는 기존에 중앙의 지침만을 집행하던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스스로 기획하고 욕구를 진단하며 서비스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간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연구(이용갑 외, 2020)에 따르면, 통합돌봄 담당자는 민간기관을 이전의 단순한 보조사업 기관이나 지도감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새로운 관점을 보였다. 민간기관에서도 기존에는 기관 간 경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미묘한 실적경쟁으로 인해 정보나 자원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통합돌봄을 통해 이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주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민관 관계에서 민간 복지영역은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며, 민간기관 간에도 실질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이용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연구(이용갑 외, 2020)에서 참여자 개별면접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도와주면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긍정적인 개인변화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진술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용자들은 요양원 등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건강,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했고, 그 의도를 거의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활발해지고 심리적 안정을 느꼈으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더 나아가, 이용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지역이 살기 좋아지고 좋은 동네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이전 사회서비스 이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전용호 외, 2022)에서 나타난 지자체 서비스 경험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일선 공무원의 무지와 배제적인 태도로 인한 모멸감 등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 나타났었다. 이와는 다르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중앙의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권화된 조건에서 주민의 욕구와 상황에 맞춘 포괄적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이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과지표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유애정 외, 2022).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과 대조군 노인들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설 입소 감소와 지역 내 거주 유지가 목표였을 때, 요양병원 입원율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재가 거주 기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노쇠 정도와 돌봄 필요 욕구는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 사회적 안정감, 주관적 건강 수준, 외로움 및 고립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개선되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성과가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과는 이번 사업이 기존 사업과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을 보여준다. 이는 분권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져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이 가져온 구체적인 성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3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의 지자체 복지에 대한 의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은 단지 ‘돌봄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분권화된 복지정책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를 통해 민간기관과의 관계, 이용자들의 체감적 경험, 정책적 성과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하여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의 사업 경험만으로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는 이른다.

---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의 20여년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지자체의 복지정책 모델이 정립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 혁신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이 앞으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해 던져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 성장 가능성이 관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지자체의 정책 기획 역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중앙집권적 체계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했지만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획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중앙에서 정해진 사업 없이 지자체가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했을 때, 지역주도적인 인식의 변화와 기획의 경험을 통한 역량 성장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극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건의로, 주거 등 타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는 타부서와의 협상에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 내부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영역의 역량 및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지역복지 차원에서 민간 복지영역은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업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과 사업 기획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복지영역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기획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질적인 수평적 파트너십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민간기관 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각기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돌봄사업의 특성상 수발, 이동, 식사영양, 가사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엮이면서 각자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기관들 사이에 서로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협력적 시너지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지자체의 중추적 역할이 돌봄 영역에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긍정적인 경험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은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복지, 보건의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간의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욕구 영역인 돌봄이라고 볼 수 있다(김보영, 2014: 53). 돌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장애, 노화로 인해 생애 동안 누구나 필요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영역이 된다. 지자체가 이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돌봄은 단지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의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학령기 아동 돌봄은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고용 문제도 중요하며, 돌봄 자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주거는 돌봄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고, 문화와 환경도 지역사회의 관계와 참여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돌봄은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협력과 연계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이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 간에 이미 구분되어 있는 구조보다는, 모든 영역이 생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돌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선진 복지 국가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책적 책임과 역할을 주로 일선 지방정부에 부여한다(유동철 외, 2018). 이는 지역 단위에서 돌봄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 분야에서 지자체에게 구체적인 과업이 주어지고 분권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본래 이 분야가 지자체가 복지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에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본 사업이었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파악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75개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그동안 중앙정부 사업 집행 역할에 익숙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어쩌면 원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했던 정책 영역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일부 지자체 대상 정책이 계기가 되어 자발적인 지자체 사업으로의 확산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통해 나타나는 주민체감과 정책성고가 다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주민관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자체 복지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개선 효과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궁극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사회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파편적으로만 대응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평가 연구에서 이용자들의 진술을 통해 보듯, 이용자들은 이 사업이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실제 성과 지표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유의미하게 포착되었다. 이는 돌봄이 원래 지자체가 중심으로 수행했을 때 효과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전 중앙정부의 파편적 서비스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했던 사업 방식의 성과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욕구에 더욱 밀접하게 반응하며, 돌봄을 통해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복지사업의 성과가 주민에게 체감되고, 지표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우수한 지자체의 복지정책 사례라 해도 주민 체감이나 성과지표 상의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즉, 지역에서 복지정책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 지역자치 과정에서의 관심으로 표면화되어 더욱 실질적인 지자체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돌봄정책에서 어떤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 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만큼 지역에서 돌봄의제가 담론화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며, 이에 따라 이것이 지자체 정책에 반영되어 정치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복지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봄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도적으로 지역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만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면 차별성있는 돌봄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가령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계정으로 전환되어서 얼마든지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방이양되어 있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도 중앙지침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을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든지, 주거관련 사업이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돌봄친화적인 주거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는데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조차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집행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중앙의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4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경상북도의 과제

지금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이 보여준 지자체 복지의 혁신에 대한 단초와 함께 이러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복지가 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성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행정뿐 아니라 민간 복지역량과 협력의 시너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을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돌봄이야말로 중앙정부와 구분되어 지자체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복지영역으로서 더욱 그 효과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돌봄정책의 성과가 더욱 큰 지자체의 관심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임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지 돌봄정책 영역을 넘어서 지자체 복지정책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정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20여개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단 16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것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이어받은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13개 지자체로 축소되면서 예산도 1/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자체가 70여개에 달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 복지정책으로서의 거의 유일하게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이 된다고 보다는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새로운 정책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전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나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최근의 늘봄학교까지 각각 전북 완주군과 서울 서대문구(김승권 외, 2013), 경남 교육청 등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화된 사례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영역의 우수 사례를 중앙정부가 차용하여 확산시킨 정책이라면 이번 통합돌봄은 일부가 아닌 여러 정책영역을 포괄하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자체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밑으로부터의 정책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통과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흐름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장벽이나 걸림돌들을 해소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2년이라는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외의 지자체에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 이 법은 그간 지자체 주도적인 통합돌봄 사업경험의 취지에 맞게 주민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자체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의 책임, 시도지사에게는 인프라 구축과 자원확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돌봄의 범위를 단순한 요양에 그치지 않고, 재택의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구강관리, 복약지도, 만성질환관리,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퇴원환자 연계 등 다학제간 협업과 연계에 대한 노력의무 역시 부과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사활동, 이동지원, 보조기기, 주야간 돌봄, 주거환경 개선,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등 광범위한 서비스 역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과연 2년 후 이러한 포괄적인 돌봄서비스와 다학제간 연계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긍정적인 측면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능동적으로 돌봄정책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경상북도는 현재의 돌봄정책의 흐름에서 후발주자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16개 지자체에는 경북 지자체가 한 곳도 포함이 안되었고, 이제 현 정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의성군 한 곳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돌봄서비스에 있어 지방지역으로서, 또한 지역소멸지역으로서 돌봄 인프라의 취약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북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경북은 경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 식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는 행복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돌봄정책 흐름과 비교하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특히 이미 서울시의 돌봄SOS,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전시의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경기도 360 돌봄 사업 등 현재 각 광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돌봄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직 경상북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어느 광역 지자체보다 돌봄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에 있는 경상북도가말로 이제라도 더욱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 더 이상 정책의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지역으로서 지역격차와 지방소멸, 고령화의 문제들을 먼저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 과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과제 선진지역’으로서 경북을 재규정하고(이원재 외, 2021)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돌봄정책에도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다양한 지역적 문제를 경험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금 지자체는 더 이상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구에 머물 수가 없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돌봄 정책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실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특히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둔 2년동안 이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진정 경상북도가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자체라면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걸기를 모든 도민의 생애에 걸친 돌봄문제로 확대시켜야 할 때이다.

##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2024. “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보도자료』 1월 10일자.
- 김보영. 2021. “복지분권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역량의 과제: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65-102.
- 김승권·이혜영·신윤경·이형진·이애희. 2013.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
- 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유동철·김미옥·김보영·김용진·김정하·박숙경·윤상용·이주언·이왕재·전근배·정진·조아라·홍인옥. (2018).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유애정·최재우·이기주·변진옥·방효중·박현경·이현지·김세진·김희성·어유경·강혜규·주하나·전용호·유원섭·윤주영·유기봉.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4차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 이용갑·정현진·유애정·박상희·이기주·최은희·강하림·김재윤·이주향·이연주·장소현·박인태·노미소·전용호·이혜진·노혜진·이자호·조경희.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2차년도)』. 건강보험연구원.
- 이원재·황세원·서재교·김보영·김민진. 2021. 『초전환 시대 대구경북 사회정책 재설계: ‘돌봄도시’로의 전환 전략 제안』. 대구경북연구원.
- 전용호·김요은·김광현·맹성준·김보영. 2022. “사회서비스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질적 연구“. 『생명연구』, 64. 139-168.
- 지역복지통합본부 공공돌봄지원팀. 2020.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도움서』. 서울시복지재단.
- 최지선·김보영·김이배. 2021.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급별 교육체계수립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청렴스타그램 소식지

##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A**  ❌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A**  Ⓞ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A**  ❌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A**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 경영목표 & 추진전략

###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사회 구축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김성훈 | 남영우